

# 세계 각국의 2008년 고용전망과 주요 고용정책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국제협력실장)

2007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4.9%로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했으나, 고용상황은 크게 호전되지 않고 연간 30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취업자 증가 규모를 기록했다. 2007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전세계적으로 금융시장에 교란요인으로 작용하여 거시경제 변수들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수년간 지속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물가에 악영향을 미쳐 경기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데 또한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각국의 2008년 경제전망은 2007년 중반에 전망한 수치들보다 하향 조정되고 있으며, 2008년 고용전망 또한 낙관적이라 할 수 없다. 특히 미국의 경우 2007년 연말부터 신규고용 성장률의 급락, 실업률의 상승, 장기 실업자의 증가 등 일련의 고용지표가 최악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소비의 감소, 투자 위축 등 경제에 다시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상황은 세계 각국의 2008년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고용정책 중 하나인 고용촉진정책은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긴급경기부양책을 통해 축소되고 있는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 고용의 감소를 막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노동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경기가 다시 상승 국면으로 회복되어야 고용 또한 악화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일본의 경우 취업률의 향상을 위해 고용대책법을 개정하여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지역고용대책, 고용지원서비스 확

대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프랑스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경제성장을 지향하면서 향후 5년간 실업률을 5%로 줄이고 고용률을 70%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을 시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35시간 근로시간 제도 등 경직된 법제도를 유연화하고, 일·고용·구매력 증진을 위한 법(TEPA법)의 추진을 통해 고용을 증가시키고 근로자의 구매력을 향상시키기를 희망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2008년 경제성장률을 10.9%로 전망하고 있는 중국마저도 고용촉진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이며, 연간 900만 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직실업자 500만 명의 재취업을 확보하며, 40~50대 100만 취업곤란 대상자의 취업을 실현하며, 실업률을 4.6% 내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95146' 정책을 2007년에 추진했으며 이러한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각국이 가지고 있는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들은 단기적으로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민자와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민개혁법안(Immigration Reform)과 근로자 자유선택법안(Employee Free Choice Act)이 2007년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일본 정부는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진행 중이며, 장시간근로의 시정과 일·가정 양립은 정부나 일본 노사가 개선하고자 하는 주요 과제다. 프랑스의 경우 노동시장을 보다 유연화하는 과정에서 사회보장, 직업교육 및 고용관련 공공서비스의 질에 있어서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유연안정성 모델을 도입하는 정책 실행방안을 추진하는 데 노·사·정이 같이 참여하고 있다. 영국은 저임금, 비숙련 직종에 주로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이슈가 주요한 개선과제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중국은 노동관련법들이 새로 시행되는 2008년 노동비용의 상승으로 인해 고용 증가의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가 그동안 정책적으로 고려하지 못했던 고용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요약하면 2008년 세계 각국의 고용전망은 좋지 않으며,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던 문제들 또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KLI**